

#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

## — 중등(중·고) 분석 결과 —

### I. 조사 개요

조사 주체	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·정책연구원
조사 기간	2026. 4. 20.(월) ~ 2026. 5. 11.(일)
조사 대상	전국 교사
응답자 수	전국 7,180명 / 중·고 합산 1,504명 (중학교 844명, 고등학교 660명)
문항 수	총 28문항 (5점 척도 및 복수응답)

※ 본 자료는 전국 조사 결과 중 중학교·고등학교 응답(N=1,504)을 별도 추출하여 분석한 것임. 중학교·고등학교는 동일한 응답 패턴을 보여 '중등'으로 합산함.

### II. 중등의 핵심 발견 — 행정에 떠밀려 교실을 떠나는 교사들

중등 교사의 위기는 '학부모 민원'이라는 단일 서사로 설명되지 않는다. 본 조사 결과 중등 교사를 교실에서 떼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'학부모'가 아니라 '행정'이라는 점이 사직 결정 요인, 부장 기피 사유, 담임 기피 사유 세 가지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.

#### 1. 사직 결정 요인 — '비본질적 행정업무'가 학부모 민원과 동률

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중등 교사의 '결정적 요인'(2개 선택) 응답에서, 1위 학부모 민원(42.4%), 2위 보수 불만족(43.7%)에 이어 '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'가 38.4%로 사실상 1~2위 그룹에 진입했다. 이는 전국 평균(23.4%)을 15.0%p, 보도자료가 강조한 사직 1순위 사유의 통상적 수치인 '학부모 민원'과의 격차가 단 4.0%p에 불과한 결과다.

사직 결정 요인 (2개 선택)	중등 (중·고)	전국
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	43.7%	42.1%
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	42.4%	62.8%
<b>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</b>	<b>38.4%</b>	23.4%
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	34.0%	33.6%
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저하	18.5%	20.3%
신체적·정신적 건강 악화	13.9%	11.2%

**함의** — 중등 교사 사직 결정 요인은 '보수 불만족·학부모 민원·행정업무' 3강 구도로 형성되며, 그 중 '**비본질적 행정업무**'는 전국 평균을 15.0%p 상회한다. 중등 교사 정책에서 행정업무 경감을 부수적 의제로 다룰 수 없는 이유다.

## 2. 부장 기피 — 책임 부담이 보상 부족과 함께 1위

부장 기피 사유에서 중등 교사는 '업무 강도 대비 보상 미흡(51.0%)'과 '부서 소관 업무 책임 부담(54.0%)'을 거의 동률로 꼽았다. 전국 평균에서 책임 부담(46.8%)이 보상 미흡(68.1%)보다 21.3%p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. '부서원 업무 조율 및 관리의 고충'도 40.6%로 전국 평균(29.9%)을 10.7%p 상회했다. 중등 부장교사가 학교조직의 중간관리직으로 기능하면서 책임 과부하를 떠안고 있는 구조가 데이터로 확인된다.

부장 기피 이유 (2개 선택)	중등 (중·고)	전국
<b>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 부담</b>	<b>54.0%</b>	46.8%
업무 강도 대비 실질적 보상(인센티브) 미흡	51.0%	68.1%
<b>부서원 업무 조율 및 관리의 고충</b>	<b>40.6%</b>	29.9%
잡은 회의 참석으로 인한 업무 가중	35.8%	41.5%

**함의** — 중등 부장교사는 보상 부족이 아니라 **책임과 사람 관리의 과부하**로 무너지고 있다. '책임 부담(+7.2%p)'과 '부서원 관리 고충(+10.7%p)'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 사실은 중등 학교조직의 운영 구조 자체

가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.

### 3. 담임 기피 — 중등 담임 위에 얹어지는 ‘비담임 업무’

담임 기피 사유에서 중등 교사는 ‘담임 업무 외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’을 25.7%로 꼽아 전국 평균(17.9%)을 7.8%p 상회했다. 교과·동아리·진로지도·생활기록부·입시 행정 등 중등 특유의 비담임 업무가 담임 위에 누적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.

담임 기피 이유 (2개 선택)	중등 (중·고)	전국
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	73.9%	85.7%
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 어려움	72.9%	70.6%
<b>담임 업무 외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</b>	<b>25.7%</b>	17.9%
담임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	20.2%	21.2%

## Ⅲ. 중등 교사의 정책 요구 — 입법보다 ‘행정 분리·이관’

### 4. 본질업무 회복 방안 — ‘법제화’보다 ‘이관·전담직 신설’

교사 본질 업무(수업 및 생활지도) 회복을 위한 우선 방안(2개 선택)에서, 중등 교사의 응답은 전국 평균과 다른 무게중심을 보였다. ‘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청 이관 확대(53.9%)’와 ‘행정 전담 교사 및 직책 신설(42.6%)’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, ‘법제화’ 항목은 56.6%로 전국 평균(64.9%)을 8.3%p 밀돌았다. 중등 교사는 입법적 해결보다 ‘행정업무 자체를 학교 밖으로 빼라’는 구조적 해법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.

본질업무 회복 방안 (2개 선택)	중등 (중·고)	전국
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(법률 명시)	56.6%	64.9%
<b>학교 공통 행정 업무의 교육청(지원청) 이관 확대</b>	<b>53.9%</b>	49.5%
<b>교원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행정 전담 교사 및 직책 신설</b>	<b>42.6%</b>	36.5%
교직원 직종별 업무 분장 기준 명확화	27.5%	30.9%

### 5. 정책 의견 미반영 원인 진단 — ‘교육부 하향식’ ‘행정 인력 취급’

현장 교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중등 교사는 '교육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(47.3%)'와 '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 인력으로 취급하는 관행(40.2%)'을 핵심 문제로 진단했다. 두 항목 모두 전국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. 행정 부담 호소와 일관된 흐름이다.

정책 의견 미반영 원인 (2개 선택)	중등 (중·고)	전국
교육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	<b>47.3%</b>	37.7%
교육적 효과보다 일시적 여론·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시	40.6%	45.8%
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 인력으로 취급하는 관행	<b>40.2%</b>	31.7%
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	35.6%	51.9%
현장 교사 참여 공식 정책 협의 기구 부재	34.4%	31.1%

#### IV. 중등 교사 정체성 — 교과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인식

##### 6. 보람의 출처와 교단을 지키는 동력

중등 교사는 보람의 순간을 묻는 문항에서 '교육과정 및 수업 연구에서 성과를 내었을 때'를 21.8%로 꼽아 전국 평균(16.3%)을 5.5%p 상회했다. 교단을 지키는 동력을 묻는 문항에서도 '교직에 대한 개인적인 사명감'이 51.3%로 전국 평균(45.5%)을 5.8%p 상회했다. 중등 교사가 '교과 전문직'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, 행정업무가 이 정체성을 침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등 교사 위기의 또 다른 축이다.

선택지	중등 (중·고)	전국
[문24]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 (2개 선택)		
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나 성장을 확인했을 때	95.5%	94.7%
교육 과정 및 수업 연구에서 성과를 내었을 때	<b>21.8%</b>	16.3%
[문25] 교단을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 (2개 선택)		
학생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	64.5%	61.0%

선택지	중등 (중·고)	전국
교직이라는 직업에 대한 개인적인 사명감	51.3%	45.5%

## V. 종합 — 중등 데이터가 말하는 것

이번 조사의 중등(중·고) 교사 1,504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, 중등 교사의 위기는 다음 세 가지 구조로 압축된다.

① **행정 부담의 중심성** — 사직 결정 요인에서 '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'가 38.4%로 '학부모 민원(42.4%)'과 사실상 동률을 이룬다. 담임 기피의 '추가 업무 부담'+(7.8%p)과 부장 기피의 '책임·관리 고충'+(7.2~10.7%p) 항목까지 종합하면, 중등 교사를 교실에서 떼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행정업무다.

② **중등 부장의 '준-관리자화'** — 교과·부서 단위 학교조직 운영 속에서 중등 부장교사는 책임 부담(54.0%)과 부서원 관리 고충(40.6%)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. 학교조직의 중간관리직으로 기능하면서 '책임 과부하'가 중등 부장 이탈의 본질이 되었다.

③ **정책 진단의 차별성** — 중등 교사는 본질업무 회복을 위해 '법제화'보다 '행정 이관·전담직 신설'을, 정책 의견 미반영의 원인으로 '교육부 하향식 구조'와 '교사의 행정 인력 취급'을 더 강하게 진단한다. 입법보다 구조적·행정적 해법에 무게중심이 있다.

결론적으로, 중등 교사의 위기는 '교실 안 갈등'보다 '교실 밖 시스템(행정·조직·정책 구조)'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. 중등 교사가 '교과 전문직'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, 그 사명감을 침식하는 행정 부담을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. 중등 교사 정책은 학부모 민원 대응 일변도에서 벗어나, 학교 행정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.

[자료 출처]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·정책연구원, 「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」 (2026. 4. 20.~5. 11. / 전국 N=7,180명, 중·고 합산 N=1,504명).

[작성] 중등교사노동조합 정책팀 (2026. 5.)